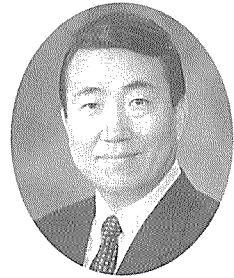


2000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이 기 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현안 경제 문제, 두 번째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 세 번째는 그러한 경제 전망 하에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이다.

첫째 현안문제는 대우문제, 투신문제이다. 현재 경제 성장도 잘되고 있고 산업생산도 높고 또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수지도 연말까지는 230억불 흑자를 낼 것 같고 물가도 사상 초유의 안정수준인 1% 내로 거시지표 또는 실물경제는 좋다. 문제는 대우, 투신문제인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실물경제 발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잘되겠다는 많은 우려를 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시지표는 좋는데 미시적인 몇 가지 문제가 우리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실 5월말에서 6월초에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다. 대우 문제를 노출시켰을 때 그 폭발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대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경제 주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큰 혼란없이 어느 정도 무사하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우 문제를 그때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대우문제를 처리해 왔다.

첫째 단계는 8월 초순에 대우와 은행 채권단 간에 특별 약정을 맺어 10조원의 담보를 맡기면서 대우가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공유하는 특별 약정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10조원의 주식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정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8월 26일에 워크아웃에 대한 대우와 채권단간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세번째 단계로 워크아웃을 위한 실사가 진행이 되어 11월 4일까지 완료가 되고 워크아웃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3 단계 과정에서 투신문제도 같이 해결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불안을 예견했었지만 다행스럽게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그 동안 걱정했던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우 문제는 이제 절차상 문제만 남아있다. 이달 말까지 절차상 해외 채권단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국내 채권단과의 마지막 결정을 해서 이번 월말이면 최종 확정이 될 것이고, 실사에 있어서도 다행히 그 동안은 항상 중간실사였지만 정밀실사가 11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정밀실사 결과와 그 동안의 중간실사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이미 워크아웃 수립시 발표된 비율에 따라서 사후 정산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대우 문제에 구체적인 확정은 이달 말 내로 끝이 나서 대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궤도로 들어 가게 될 것이다.

두번째 현안과제인 투신문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발표 했다. 현재 금융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대우투신이 가지고 있는 대우채권은 전부 18조인데 그 중에서 환

매가 허용이 된 개인 채권은 8조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조원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펀드로 보면 49조의 펀드에 8조의 대우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환매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대우채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49조원의 펀드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매에 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해 놓을 계획이다.

현재 투신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보면 현재 현금이 18조가 있고, 투신사가 가지고 있는 통안증권이나 국공채가 10조 이상으로 지금 즉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유동성은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37조이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1단계 장치이고 2단계 장치로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만약에 추가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채권안정기금을 10조원 더 추가할 것이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투신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안정된 금융 시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의 생각만이 아니고, 많은 외신들이 이번의 대우문제, 투신문제를 해결해 나간 당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우선 세계 전망은 다행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경기는 금년보다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기는 내년에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특히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세계 교역량 전체로 보면 금년에 약 3% 수준의 교역량 증가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약 5% 정도의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이나 활성화에 가장 비례되는 지표가 세계 교역량인 것 같은데 내년의 세계 교역량이 어느 해보다도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가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가 안정을 포함한 경제 안정이라고 본다.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도 물가 불안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너무 낙관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돌이켜보면 금융대란설이 한달 전부터 나돌아서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오히려 불안한 심리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언론도 가급적이면 가설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데,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여러 가지 논리로 볼 때 인플레 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인플레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여 내년의 물가는 3% 내외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것이 첫 번째 경제 정책이다. 다만 이러한 물가 안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요를 억제시켜서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가 요인을 줄여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물가는 수요측면, 원가측면이 있는데 정부로서는 통화발행을 억제하는 수요측면 보다는 원가측면, 비용측면을 가급적 줄여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100만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이러한 실업을 어느 정도 흡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적정환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국정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6·25때는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교량이 파괴되는 가시적인 국난이었던 것에 비해, IMF를 지나는 동안 중소기업 2만 3천개가 도산하고 1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IMF를

제2의 국난이라고 한다. 실직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이 파괴된 이상의 비극은 없는데 이 사회에서 아직도 비극을 겪고 있는 100만명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투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에는 기술개발투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개발투자, 설비투자는 내년에도 더욱 확충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금융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인축, 통화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원가측면을 살펴보면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산물인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을 좀더 원활히 하고, 공기업들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를 내려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 측면에서도 현재 노사정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병행된 수준의 임금으로서 노동 비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두번째 중점 과제는 역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기업·금융·공공·노사 개혁을 마무리하고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른바 재벌개혁으로 일컬어지는 8가지 원칙, 5대 원칙과 3가지 정책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각 기업이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할 것

이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것이 내년에는 더욱 가시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1세기는 단순히衣食住의 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배려를 할 것이다. 또 이것을 통해서 만이 우리의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번째 중점 과제는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이미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인, 자본, 노동, 토지가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였지만 21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정보, 문화적 창조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업의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요소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자원이나 정책이 이러한 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 한 가정에 한대 이상의 P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천오백만대의 컴퓨터를 공급할 것이고 제 3세대 통신기기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음성, 데이터, 인터넷의 복합기능을 갖는 3세대 통신기기라고 할 수 있는 IMT2000이 월드컵 개최시점에는 상업화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고, cyberkorea21이라는 개혁으로 2002년까지는 super information highway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정보화 시대, 지식 시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소득분배 문제이다. 과거에는 어떤 물질, 소위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본의 크기가 소득분배를 가져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가져오고, 개인별로 소득격차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정보화를 하고 누가 더 지식산업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격차는 종래의 격차 이상의 엄청난 격차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8년째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미국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60% 이상을 계속 점유해 온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화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세계 시장이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측면에서 미국 등의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과 대립과 격차의 근원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표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계평화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제적인 사회에서뿐

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많은 경제주체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식, 정보의 갭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뒤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IMF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야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4대 개혁이 조만간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런 터전 위에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21세기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는 옷로비, 언론탄압 등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 각 주체들이 다 합심하여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적 역량은 다른 어느 나라 못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